

여야, 김이수 · 여야정협의체 합의 불발

〈헌법재판소장〉

丁의장, 김이수 '직권상정' 시사 5·18 특별법 합의 실패 대선 공동공약 신속 처리키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여야정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대선공동 공약에 해당하는 62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김 헌재소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차이만 확인했을 뿐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31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헌재소장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연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공동으로 이야기했다. 이 재판관 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김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협의체 역시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에서는 정의당을 빼고 진행하자고 말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법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 의사를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공동 공약이었던 62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 간사 단에게 통과를 독려기로 했다. 교섭단체별로 무쟁점법안 통과 책임자를 뒤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쟁점 법안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 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공식 문제를 각 당 교섭단체별 수석회동에서 논의해서 9월 국회 전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물관리 일원화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물관리 일원화 특위 설치에 대해 "대략의 틀을 교감했으며, 이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이낙연 "가축 질병, 국제사회와 협력"

이낙연 총리는 28일 "가축의 질병이 인류의 건강을 직격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 실행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사태가 한국에서도 생겼다. 역시 유럽에서 시작된 간염 소시지 파동도 이곳 한국에까지 파급됐다"면서 이번 대회의 주제인 '원 헬스, 뉴 웨이브(ONE HEALTH, NEW WAVE)'에 대한민국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류가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발생한 식품 파동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세계의 수의사 여러분이 해마다 한 자리에 모여 지혜를 나누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 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인류보건의 증진, 동물질병의 퇴치, 건강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신종전염병의 4분의 3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한다. 인간들은 AI(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의 출현을 보면서 새와 나뉘고 박쥐를 다시 보게 됐다"며 "전염병 정보를 확산했던 인간들은 신출귀몰하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와 끝을 모르는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또 "인류는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라는 세 가지 공포와 싸워 왔다. 이 세 가지 공포는 이제 관리와 통제 범위 안으로 거의 들어왔다"며 "질병도 중세의 페스트처럼 인류를 광범하게 제압시키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지혜와 관리체계 또한 끊임없이 발전한다"며 "오늘 개막한 세계수의사 대회가 바로 그런 인류의 지혜와 관리체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번 대회는 수의학의 비전과 사회적 역할을 담은 'Ver Vision 2050(수의학 비전 2050)' 이른바 '인천선언'을 채택한다고 들었다"며 "이는 1948년 의사들이 윤리선언으로 발표한 '제네바 선언'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세계 수의사 여러분의 해안과 실천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맺었다. /뉴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규칙 등을 다룰 '지방선거기획단(기획단)'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획단을 꾸려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기획단 단장에는 3선의 이춘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부단장은 재선의 김민기 수석사무부총장, 간사는 조선의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대변인은 조선의 백해련 당 대변인이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재선의 진선미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장이 합류했다. 조선의 김해영 정책위원회부위원장, 송기현 법률위원장,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 조승래 원내부대표도 참여했다. 원외 인사로는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이 포함됐다.



의원 질의에 답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준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 구성과 관련해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갔다"며 "사무총장과 조직·전략·정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여성을 3명 넣고, 약간의 지역 배분을 추가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단 구성은 총 11명인데 (최고위에서) 호남지역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향후 추가 인선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기획단은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방향을 잡고 밑에 당헌·당규 소위를 두는 등 기본 준비를 했다가 (후후)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청와대 파견 등으로 인한 사고당(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위원회)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다. 당 초 조강특위도 정당발전위원회나 지방선거기획단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구성하려 했으나 위원들의 중복 문제로 인해 일주일가량 인선이 늦어졌다. /뉴스

김승환 교육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 활동

교육자치 · 학교자율화 계획 등 심의... 3단계 추진 전략 수립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현안과 교육 분야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이다. 교육자치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

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당연직 위원과 학계·법조계·시민사회·학교현장 민간위원 등 14명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꾸려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차 회의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

화 추진계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로드맵을 통해 ①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 '기반 조성' (17) → ② 학교에 부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 (18) → ③ 법령 제·개정 등 통해 혁신 정착시키는 '현장 정착' (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 검토 후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정해은 기자

정우택, 지방선거 야3당 연대 제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의 야3당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공화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같은 구도라면 각 당에서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나오면 어렵지 않느냐는 인식이 많다"며 "그렇다고 하면 야3당 만이라도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어떠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화두는 수도권만이라도 선거연대를 해보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며 "당에서 공론화가 되고, 담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